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18.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7월 10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협조 등을 규정(안 제1조~제5조)
- 나. 인구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15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인구정책사업
 - 인구교육, 인구의 날, 지역격차 해소 등에 관한 사항
 - 남양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다. 인구정책 지원기금 등을 규정(안 제16조~제26조)
 - 기금의 설치·용도, 운용계획 및 결산
 -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심의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2
- 나. 예산조치 : 불임3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정책기획과
- 라. 입법예고 : 2024. 5. 23. ~ 6. 12. (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에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인구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교육 및 인구의 날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인구 현상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최근 인구감소와 급격한 합계출산율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시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전반의 폭넓은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 변경·확장을 통해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근 5년간 인구 추이

(단위 : 명/매년 6월 기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수	707,485	724,183	736,212	734,460	733,279
증감수	-	+16,698	+12,029	-1,752	-1,181
증감률(%)	-	2.36	1.66	-0.24	-0.16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최근 5년간 출생률 추이

(단위 : 명)

지역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출생아수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00
	합계출산율	0.918	0.837	0.808	0.778	0.720
경기도	출생아수	83,198	77,737	76,139	75,323	68,800
	합계출산율	0.943	0.878	0.853	0.839	0.770
남양주시	출생아수	3,855	3,683	3,596	3,609	3,200
	합계출산율	0.908	0.868	0.834	0.821	0.750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시군구/출생아수,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최근 5년간 이동자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전입	96,451	93,021	105,754	75,909	65,539
총전출	77,180	81,925	84,570	71,078	69,658
순이동	19,271	11,096	21,184	4,831	-4,119
시도내이동- 시군구내	30,331	29,094	34,574	26,582	22,639
시도내이동- 시군구간 전입	24,804	23,359	27,306	19,114	16,371
시도내이동- 시군구간 전출	19,715	23,999	22,562	19,150	21,323
시도간전입	41,316	40,568	43,874	30,213	26,529
시도간전출	27,134	28,832	27,434	25,346	25,696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시군구별 이동자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나. 비용 발생 요인

○ 초저출산의 인구위기에 남양주시의 선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폐지 후 기존에 조성된 재원을 인구정책 지원기금으로 전출, 이후 2025년부터 4년간 매년 10억원을 적립하고자 함

※ 총 기금조성 목표 : 90억원 → 5년 경과 후 존치 필요성 있으면 연장 가능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9,000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 조성	5,000	1,000	1,000	1,0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기타사항

○ 제8조~제10조 인구정책사업, 인구교육, 인구의 날에 관한 사항

○ 제12조~제13조 기업·단체 등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의 해당 조례 조항은 현재 전반적인 인구정책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 수반요인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부를 생략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0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 전출금		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0
	지방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0
	세외수입	5,0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